

중국 『취업촉진규획(2011~2015년)』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개요
2. 취업촉진규획(2011~15년)의 주요 내용
3. 평가

주요 내용 ●●●

-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월 24일 7개 관련 부처가 연합하여 제정한 『취업촉진규획 2011~2015년(就业促进规划 2011-2015年)』을 비준하였음.
- 본 규획은 중국정부가 취업에 대해 처음으로 비준한 국가급 5개년 전문항목 규획으로, 12·5규획 기간의 취업촉진을 위한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발전목표 등을 확정하였음.
 - 미래 취업 발전 추세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규모 확대, 구조개선, 효과적인 실업 조절, 인력자원 개발, 취업의 질적 향상, 인력자원시장 건설, 노동자 권익보장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음.
 - 주요 목표로 2015년 도시 신규 취업자 누계 4,500만 명, 농촌 이전 노동자 누계 4,000만 명, 도시 등록 실업률 5% 이내, 고급기능인재 3,400만 명, 전문기술인재 6,800만 명, 최저임금 13% 이상 인상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임무와 정책도 함께 제시하였음.
- 취업촉진은 중국의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초석인 만큼, 이번 규획의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 고용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중국의 취업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함.
 -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엔 환경과 사회요소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계획, 총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1. 개요

-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월 24일 7개 관련 부처가 연합하여 제정한 『취업촉진규획 2011~2015년(就业促进规划 2011-2015年)』(이하 규획)을 비준하였음.
- 본 규획은 중국정부가 취업에 대해 처음으로 비준한 국가급 5개년 전문항목 규획으로, 취업촉진을 위한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발전목표를 확정하였음.
- 규획 제정에 참여한 7개 관련부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신부,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로 모두 국무원 취업업무 연석회의의 핵심 구성원임.
- ‘취업 우선’이라는 규획 전개를 통해 중국 내 취업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외부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경제 구조전환으로 12·5규획 시기 취업 전망이 좋지 않음.
- 노동력의 공급과잉으로 취업총량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5년 내 도시의 신규 취업자와 더불어 농촌잉여 노동력의 이전(转移)취업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 기술진보와 산업고도화, 도시화에 따라 구직난과 고용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모순 또한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환경과 사회요소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계획, 총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2. 취업촉진규획(2011~2015년)의 주요 내용

가. 기본원칙

- 취업촉진과 경제사회 발전의 상호 결합
- 경제사회 발전에서 취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급선무로 함.
- 경제발전이 취업 확대로 이어져 경제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보장함.

■ 취업촉진과 인력자원 개발의 상호 결합

- 과학기술 발전, 노동자 역량 향상, 경영혁신 전환 발전을 추진함.
- 인력자원 개발, 직업훈련과 창업훈련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노동자 직업소양과 취업능력 확대를 통해 취업의 질을 향상시킴.

■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책임을 결합

- 인력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기초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데 제도적·체제적인 장애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도 강화하도록 함.
- 취업촉진의 제정, 실시와 조정을 경제사회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고, 사회 각 분야의 역량을 동원함. 특히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 단원, 부녀자 연합, 장애인 연합 등 사회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시켜 취업 확대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함.

■ 기업발전 촉진과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상호 결합

-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고 기업과 직원이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구 조성을 모색함.
- 노동자의 취업 권리와 보수, 복지 등을 보호하여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통해 취업규모를 확대하고 취업의 질을 향상함.

나. 발전목표

■ 취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업구조를 합리화함.

- 도시 취업자를 4,500만 명으로 늘리고, 농촌으로부터 이전된 잉여 노동취업자를 4,000만 명으로 늘림.
- 도시취업 비중을 점차 높이고, 3차 산업 취업구조를 보다 최적화함.

■ 효과적인 실업 통제로 취업형세 안정을 유지함.

- 도시 등록 실업률을 5% 이내로 통제하고, 실업자 취업 준비에 평균 실업주기를 보다 단축함.
- 취업 취약계층과 영취업(零就业 가정¹⁾)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업을 지원함.

1) 도시 '영취업 가정'은 비농업 호구가정 중 법정 노동연령(재학생, 현역 군인, 명예퇴직자, 미리 퇴직수속을 마친 취업자는 제외)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이 있는 가정 구성원 모두가 실업 중인 가정을 지칭함.

■ 인력자원 개발수준을 향상시킴.

- 노동자가 효과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전국 기능 노동자 수를 1억 2,500만 명으로 늘리고, 그중 고급기능 인재는 3,400만 명(27%)으로, 전문기술인재는 6,800만 명으로 늘림.

■ 취업의 질을 향상시킴.

- 기업의 노동계약 체결률이 90%, 기업의 단체계약 체결률이 80%에 이르도록 함.
- 직원의 임금 수입수준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기준을 연평균 13% 이상 증가시키며, 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이 현지 도시지역 취업자 평균 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
-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안정성이 뚜렷하게 향상되도록 함.

■ 통일된 규범으로 융통성 있는 인력자원 시장을 형성함.

- 인력자원 시장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통일시킴.
- 도농의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취업과 인재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전국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자 권익 보장기구를 개선함.

- 기층의 노동관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노동보장감찰을 하고, 노동인사 중재기구를 구체화하고 완성시켜 중재율이 90%에 달하도록 함.

표 1. 12·5규획 시기 주요 취업 지표

지표	2010년	2015년
도시 신규 취업자(만 명)	(5,771)	(4,500)
도시 등록 실업률(%)	4.1	<5
농촌이전 노동자(만 명)	(4,500)	(4,000)
고급기능인재(만 명)	2,863	3,400
전문기술인재(만 명)	4,686 ①	6,800
기업 노동계약 체결률(%)	65	90
기업 단체계약 체결률(%)	50	80
최저임금기준 연평균 증가율(%)	12.5	>13
노동인사 쟁의 중재 판결률(%)	80	90

주: 12.5규획 시기의 주요 지표는 예기성 지표임, () 안은 5년 누계수치, ① 2008년 말 데이터.

자료: 『促进就业规划2011-2015年』.

다. 주요 임무와 정책

1) 경제발전의 취업 창출 역할을 향상시킴

■ 취업 우선전략을 실현

- 각급 정부는 국민경제계획, 산업구조와 산업배치에 대한 중대 조정 시 취업을 사회경제 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취업목표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경제발전 속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재정금융 산업 등 거시정책 제정 시 취업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업 리스크를 예방함.
- 취업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재정 보장 등 사회 각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기구를 형성하며, 정부 투자와 중대건설 프로젝트가 취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투자가 취업촉진 여부를 평가하는 기구를 설립하도록 연구함.

■ 취업 창출 능력이 강한 산업과 기업 발전에 주력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속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취업 분야를 개발하고 지식집약형 취업 기업을 증가시킴.
- 경제전환과 구조조정 중 노동력 비교우위의 기술진보와 산업고도화 전략 실시에 박차를 가함.
- 3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서비스업 취업 채널을 확대하고 금융, 물류 등 생산성 서비스업 및 요식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하이테크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정책지원의 강도를 높여 하이테크 서비스 취업비중 향상에 주력함.
- 안정적인 산업고도화 실현과 자본집약, 하이테크 제조업 발전 시 노동집약형 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노동집약형 기업과 중소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소형기업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2차 산업의 비중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함.
- 현대농업, 정밀농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1차 산업의 취업 잠재능력을 발굴하며, 농업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여 농촌취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

■ 창업으로 취업을 이끌도록 촉진

- 노동자 창업의 세수우대, 소액대출담보, 재정보조금, 자금보조금, 부지안배 등의 지원정책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비준수속 간소화, 리베이트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함.
- 창업훈련시스템을 완비하고 창업자에게 프로젝트 정보, 정책자문, 개업지도, 융자서비스, 인력자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에 창업 인큐베이터 시범기지 건설을 장려함.

- 창업형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홍보와 여론을 유도하여 창업 정신을 널리 알리며, 성공 사례는 표창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함.

2)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 실시

■ 취업촉진에 보다 유리한 재정보장정책을 실행

- 공공재정을 국가산업정책이 이끄는 소형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도록 하고, 재정지출은 점차 민생에 집중시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킴.
- 각급 정부는 취업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자금사용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취업자금 지출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자금사용의 효과와 이익, 관리 수준을 향상시킴.

■ 취업을 지원, 촉진하는 세수우대정책 실행

- 건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서비스업과 소형기업 발전에 유리한 세수정책체계를 완비하고, 기업세 부담을 경감하여 도농 노동력 취업을 흡수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 대학 졸업생, 농민공, 취업 취약계층 등 중점 집단을 위한 취업 세수정책을 개선하고, 기업이 중점집단의 취업을 흡수하도록 장려함.

■ 취업촉진에 보다 유리한 금융지원정책을 실행

- 적극적인 화폐정책으로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전략적인 경제구조 조정을 지원하면서 경제발전과 취업창조를 양호하게 하는 거시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신용대출정책을 강화하고 금융기구의 지원을 국가산업정책 방향인 노동집약형 산업, 서비스업, 소형기업으로 확대하고, 자주적인 창업을 유도하도록 장려하며 소형기업 대출의 세제지원정책을 촉진하도록 함.
- 소액담보대출정책을 개선하고 정책감독평가기구를 설립하여 확실한 정책효과를 실현하도록 함.

■ 취업촉진에 보다 유리한 대외무역정책 실행

- 국내취업에 영향력 있는 수출입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무역분쟁 처리에 중요한 근거가 되도록 함.
- 취업 증가에 유리한 업종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역마찰 영향이 큰 업종과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로 실업을 감소시키는 대외노무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함.

■ 노동자의 다차원적인 취업을 장려하는 지원정책 실시

- 우대정책과 취업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모색하는 자주적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 소형기업의 노동자 취업, 임시직 및 기타 형식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노동관계, 임금 지불제도를 개선하면서 취업과 사회보장의 연동 기구를 개선하여 노동자 취업의 안정성을 강화함.

3) 도농과 중점집단의 취업을 총괄

■ 도농과 지역 취업을 총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

- 도농을 총괄하면서 노동자의 건전하고 평등한 취업제도를 건립하여 노동자 취업 시 도농 차별이 없는 공평한 취업환경을 조성함.
- 분류지도를 강화하고 동부지역의 산업고도화와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취업의 질을 제고하며, 중서부 지역은 산업이전과 결합하여 보다 많은 노동력의 전환취업을 유도하게 함.
- 소수민족지역과 빈곤지역의 취업문제 해결정책을 보다 중시하고, 경제발전과 취업 확대를 지원함.

■ 대학 졸업자와 기타 청년 취업을 확실하게 향상시킴.

- 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계속해서 중시하며, 대학 졸업자의 취업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중소기업이 흡수하도록 장려함.
- 대졸자의 도농기층, 중서부 지역, 민족지역, 빈곤지역과 국경지역 취업을 유도 및 장려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실현함.
- 대학 졸업자의 자주적인 창업을 장려하고, 대학 졸업자의 취업실습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과학연구기관에서 대졸자 취업을 흡수하도록 장려함.
- 적극적으로 대학 졸업자를 징집하여 직업 의무병에 입대하도록 하며, 여대 졸업자의 취업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취업이 어려운 대학 졸업자와 기타 장기 실업청년의 지원을 강화함.
- 인터넷 취업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실명제를 기초로 하는 대학 졸업생 취업 통계제도를 개선함.
-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더욱 적응하게 하고, 인재배양의 질을 향상시키며, 퇴역군인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장려함.

■ 농촌 잉여 노동력의 이전취업을 추진

- 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현(縣)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향진기업과 비농(非農) 산업을 발전시켜 보다 많은 농촌 잉여 노동력이 현지 취업하도록 지원함.
- 창업정책을 개선하여 농민공이 귀향하여 창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동 취업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며, 직업훈련·취업서비스·노동 권익보호 업무기구를 개선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 노동으로 안정적인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일정기간 동안 도시에 거주한 농민공 및 그 가족들이 도시 주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 도태되고 낙후된 기업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를 모색

- 도태된 기업들의 퇴출과 직원 권익보장을 총괄하고, 이들의 적절한 일자리를 위한 협조기구를 완비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함.
- 지원과 자금투입 정책을 개선하고 직원의 노무관계와 사회보장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기업에서 직업 이전 전문 훈련, 안정적인 취업, 실업 감소를 지원하게 함.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

- 건전한 취업제도와 취업지원정책을 건립·완비하여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지원기구를 만들도록 함.
- 「장애인 취업조례」를 관철시켜 장애인의 취업촉진과 보호정책조치를 개선하고 당정기관, 사업단위내 일정 비율의 장애인 취업을 추진하며 복리기업, 맹인 안마기구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창업과 취업을 돕고, 지역사회의 도시편의 서비스 네트워크에 취업하도록 지원함.
- 장애인 연맹조직과 연합하여 취업지원 기구를 세우고, 각급 정부개발의 공익성 일자리에 장애인을 우선 안배하며, 지속적으로 부녀자 취업업무를 모색하도록 함.

4) 인력자원의 대대적인 개발

■ 전문 인재집단 건설을 강화

- 보다 개방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하여 해외 유학 인재를 흡수하고 창업 혹은 여러 형식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함.
- 해외 고위층 인재 도입계획을 실시하여 유학생 귀국 창업 지원계획과 유학생 창업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전문기술인의 직함제도와 직업자격제도의 개혁을 총괄하고, 전문기술인재 평가기구를 개선하며, 전문기술인재 직업 진입을 규범하고 직업수준 및 직무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전문기술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완비함.

■ 도농 전체 노동자의 직업훈련제도를 완비

- 시장수요와 취업요구를 결합한 직업훈련을 강화함.
- 취업기능훈련, 부서기능 업그레이드 훈련과 창업훈련 추진을 총괄하고 현대 도제식 훈련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노동자 종신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도농 노동자가 맞춤형 훈련을 받고 직업 기능수준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함.
- 보다 질 높은 훈련으로 취업과 연계되도록 직업훈련기구와 직업기능 실천기지를 건설하며, 장애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훈련보조금 정책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기능인재를 배양

- 기업이 주체가 되어 보다 나은 직업학교의 기초를 완비하고 학교 교육과 기업배양의 긴밀한 관계, 정부지원과 사회지원을 상호 결합시켜 고기능 인재배양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대형 핵심기업, 중점직업학교와 훈련 기구를 바탕으로 국가 고급기능(高技能) 인재 진흥계획을 실현하여 고급기능 우수인재와 중점 업종(영역)에서 수요가 시급한 고급기능 인재를 배양하도록 함.
- 직업자격증서제도(职业资格证书制度)를 개선하고, 직업 도덕과 지식수준을 중시하는 기능인재 평가시스템, 다차원적인 기능인재 평가기구를 마련하여 기능인재의 성장을 원활하게 함.

5) 인력자원시장 건설 강화

■ 통일되고 규범적이며 융통성 있는 인력자원시장 형성에 박차를 가함.

- 인력자원 배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인력자원시장의 도농, 지역, 신분에 따른 분할을 점차 없애 도농간, 노동자간 평등한 취업을 촉진함.
- 노동력시장과 인재시장의 통일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 부문의 거시조정과 공공서비스, 시장주체의 공평경쟁, 중개조직 규범서비스의 시장에 따른 운행구조를 완비하여 규범적인 관리제도와 융통성 있는 시장운행기구를 형성함.
- 인력자원시장 감독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인력자원시장 정보 발표제도도 개선하여 인력자원시장의 법제화 건설에 박차를 가함.

■ 공공취업과 인재 서비스를 강화

- 공공취업과 인재 서비스기구 공공관리와 서비스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도농의 공공취업과 인재 서비스 시스템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취업과 인재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 전문화와 정보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도농이 평등한 공공취업과 인재 서비스 제도를 완비하여 노동자에 대한 무료취업 서비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특정 집단의 전문항목 취업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 취업 서비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서비스 기능을 다양화하여 노동자를 위해 양질의 취업 서비스를 제공함.
- 기층 취업과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전국의 취업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모집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수요 예측을 전개하여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을 유도하고 노동력 공급구조를 개선함.

■ 인력자원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전문화, 정보화, 산업화된 인력자원 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하여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유도, 정책지원과 환경조성을 중점으로 하여 인사대리, 인재추천, 인원훈련, 노무파견 등 인력자원 서비스 발전을 규범화하도록 함.
- 브랜드 추진전략을 실시하여 일련의 인력자원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홍보역량을 강화하며 인력자원 서비스산업원(产业园) 발전을 추진하여 규모의 효과를 형성하도록 하고, 다차원적인 인력자원 서비스 기구 집단을 구축하여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함.

6) 실업예방과 조정 강화

■ 실업통계제도와 실업경보 기제를 마련

- 취업과 실업등록 관리방법, 실업률 통계조사를 개선하도록 함.
- 실업동태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기업의 일자리 변화를 모니터링하도록 함.
- 실업예보제도를 실행하여 예보, 예측을 강화하고 대응조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실업예방과 통제기구를 완비, 건립

- 실업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구조조정과 중대한 재난 및 위기상황 출현으로 인한 실업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대응방안을 제정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수용 범위에서 취업안정과 실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기업의 대규모 감원을 규범화함.
- 실업자들을 조직하여 취업을 위한 훈련, 지도, 서비스, 지원 등으로 실업주기를 단축하고, 실업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취업 안정성을 향상하도록 함.

7) 노동관계 협조기구와 기업 임금분배제도 완비

■ 노동표준체계와 노동관계 협조기구를 완비

- 근무시간, 휴식휴가, 여직원과 미성년자 특수보호 등의 기준을 수정, 개선하여 노동정책기준 관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함.
- 노동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소기업과 농민공의 노동계약 체결률을 높이고 노무파견공의 규범관리 강화와 노동고용등록제도(劳动用工备案制度) 수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 통일된 노동고용 정보 데이터(劳动用工信息数据库)를 구축하도록 함.
- 단체협상과 단체계약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확대하여 단체협상의 실효성을 향상시킴.
- 노사정 3자 기구를 건설하여 3자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단체협상쟁의 처리방법을 개선함.

■ 임금수입 분배제도 개혁을 심화

-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고 최저임금기준을 점차 제고시키며, 임금 단체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임금지도선(工资指导线)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자원시장의 임금지도가격과 업종별 노무원가 정보 가이드(行业人工成本信息指导) 제도를 개선하여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기업 보수조사와 정부 발표제도를 수립하도록 함.
- 국유기업 임금총액 관리방법을 개혁하고, 업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며,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고위층의 보수 관리를 엄격하게 규범화함.
- 기업 임금지불 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임금보증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보상을 기업이 책임짐과 동시에 행정사법과 연동하여 정부기구 및 정부산하에서 관리, 책임지도록 개선함.

8) 노동보장감찰과 노동인사 쟁의 중재·해결을 강화

■ 노동보장감찰체제 건설을 강화

- 노동보장감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감찰기구의 집행 효율을 향상시키며, 노동보장 감찰과 형사 사법 연동기제 및 종합관리 기제를 개선하고, 형사안전이송제도와 안전처리조사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 노동보장감찰 입법을 추진하여 중대한 노동보장 위법행위의 사회공포제도를 수립하고 전역에 감찰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함.

■ 노동인사쟁의 처리효율을 강화

- ‘예방 위주, 기층 위주, 조정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고, 기업이 내부협상조정기구를 건립하도록 유도하며, 향진에 노동쟁의 조정기구를 마련하여 노동 분규를 해결하도록 함.
- 단체노동쟁의 응급처리 기구와 노동쟁의 중재기구를 완비·전문화하고, 중재처리 제도를 개선하며, 규범화된 절차와 법에 의거, 노동쟁의를 적시에 공정하게 해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3. 평가

■ 취업촉진은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초석인 만큼 본 계획의 전략적 의의가 큼.

-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인난과 이로 인한 임금상승 압력 속에 노동력 잉여 문제와 구직난 해결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임.
- 본 계획 발표로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 이번 계획은 취업촉진에 관한 첫 국가급 전문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취업촉진을 12·5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 목표로 정해 민생 수요의 보장과 개선은 물론 경제발전과 취업확대의 양호한 상호작용이 경제발전방식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를 다시 취업 창출과 확대·지속가능 발전으로 연계시킴.
- 단기적으로는 12·5계획 기간 직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 취업환경을 개선하여 도농 간 공평한 취업을 강조함은 물론 건전한 인력자원시장·노동관계·수입분배·감찰집행·쟁의협약·노동자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취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중시하고 있음.

■ 한편 시대변화에 따른 취업에 대한 관념과 의식구조, 기대치의 변화도 필요함.

- 보다 나은 작업환경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대졸자와 신세대 농민공의 취업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는 높아진 반면, 산업구조는 뚜렷한 변화가 미미하여 이에 대한 극복과 의식구조 변화가 더불어 필요함. KIEP

참고자료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发展改革委, 教育部, 工业和信息化部, 财政部, 农业部, 商务部 2012. 『促进就业规划2011-2015年』. (1. 24)

新华网 2012. 『促进就业 改善民生：解读我国首部促进就业的国家级专项规划』. (2. 8)

新京报 2012. 『“十二五”最低工资年长13%以上』. (2. 9)

光明日报 2012. 『如何接好就业这道“题”促进就业要见“实”招』. (3. 7)

求是理论网 2012. 『中央为何对就业工作越来越重视』. (3. 16)

中国发展观察 2012. 『张丽宾：促进就业是政府的首要任务』. (4. 5)

자료 정리: 중국북경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김상국 (crebiz39@gmail.com)